

당기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정

2020.4.1. 제1기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20.5.31. 제1기 전국운영위원회 1차 개정
2020.10.26.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2차 개정
2021.2.23.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3차 개정
2021.8.22.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4차 개정
2021.9.10.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5차 개정
2022.5.28.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6차 개정
2023.8.27.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7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4조(당기위원회) 및 제39조(포상과 징계)에 따른 당기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 중앙당기위원회와 시·도당기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지위 및 독립성) ①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관이다.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4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당기위원회

제5조(권한)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구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진술 및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명을 받은 당원과 당 기구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위원회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당기위원회가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기위원회의 위원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대표가 임면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대표는 위원 추천 시 권리당원 공모절차와 선출 선거를 통해 확정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당직자 선출 선거를 준용한다.

④ 공모의 지원자 미달 및 위원의 상시적 결위 시, 위원 추천은 본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시·도당기위원회의 위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의 결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차기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⑧ 당기위원회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구성한다.

⑨ 당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당내 조직의 겸직을 금지한다.

제7조(소집 및 의사)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본 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과 영상이 송수신되는 화상회의 및 온라인 문자회의로 회의를 소집·의결할 수 있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피제소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특수관계나 관련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당기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피제소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

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당원의 징계

제9조(징계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당헌·당규를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결정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3.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강령의 정신에 현저히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5.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당에 해를 입힌 경우
6.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다른 당원에게 해를 입힌 경우
7.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8. 당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9. 선거부정 또는 경선 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당적의 박탈
2. 당원자격정지 :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직위에 따른 권한을 포함한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행사의 정지
3. 당직박탈 : 당기구에서의 직위 박탈
4. 당직정지 :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직위에 따른 권한행사의 정지
5. 경고 :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징계와 함께 기간 및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물 게재 금지 및 삭제 요구
2. 각종 당내회의의 참가 및 참관의 금지
3. 제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또는 연락 금지
4. 경제적 피해의 배상
5. 필요한 교육 또는 봉사의 이수
6. 기타 가해행위의 중단 및 피해 회복·2차가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1조(징계의 감경과 가중) ① 피제소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 징계 양정 시 이를 반영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0조(징계의 종류) 제2항의 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불이행하여 다시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 양정 시 이를 반영하여 가중할 수 있다.

제12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징계 제소는 당원 또는 당기구가 위원회에 징계에 관한 제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출 방법 및 그에 따른 제출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 제출한 날짜

2. 우편 또는 팩스(fax)에 의한 제출 : 소인의 날짜

3. 전자우편에 의한 제출 : 해당 전자우편에 기록된 수신 시각

② 당대표 및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그것이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하거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소는 피제소자의 소속 시·도당기위원회에 하며, 해당 시·도당기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당기위원회가 제소인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른 시·도당기위원회로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절차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서면으로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 및 방법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피제소인은 본 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추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할 것을 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는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연장사유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결의 등의 사유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은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관한 의결의 결과를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7일 이내 통보하고, 그 후에 당의 온라인 게시판에 결정 내용을 공표한다. 단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미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결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확정되어 효력을 가진다. 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당직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조치)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소인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징계 결정의 확

정 전에도 제10조(징계의 종류)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조정) ① 위원회는 제소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심의에 들어가기 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정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징계심의에 들어간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시·도당기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12조(제소 및 조사명령) 제1항의 방법으로 해당 시·도당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시·도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결정문, 관련 심사자료 등 일체를 중앙당기위원회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기위원회의 심사절차는 본 조 제3항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되며, 절차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결정의 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당기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확정된다.

제17조(재심청구) ① 피제소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 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전국당원대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중앙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는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 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④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⑤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온라인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탈당자에 대한 특칙) ① 제소된 피제소인이 징계결정 전에 탈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소절차를 중지하되, 이후 피제소인의 복당 등이 확정되면 중지되었던 제소 건을 재개한다.

② 제소된 피제소인이 징계결정 전에 탈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무총국에 통지하여 탈당원명부에 피제소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결정을 받은 당원이 징계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하는 경우 사무총국은 탈당원명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규칙) 중앙당기위원회는 이 당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본 당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절차 중단) ① 위원회 결위 등으로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무정지 기간에는 모든 제소 절차가 중단되며, 제13조(절차 및 결정)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한을 기산하지 않는다.

② 본 조 제1항은 2021년 8월 22일까지 접수된 기제소건에 한하여 소급적용한다. 단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기제소건을 소급적용함에 있어 본 당규 제3장(당원의 징계) 제13조(절차 및 결정) 제1항의 기간 산정은 전국운영위원회의 본 조 제1항 개정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며, 기간 산정 의결일 전까지 해당 기제소건의 기간은 경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